

주간 통일정세

2015-09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박근혜 정부 2년 평가...“남북관계 줄곧 파국”(2/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신뢰의 간판 밑에 대결을 격화시킨 반통일죄악의 2년'이라는 제목의 장문 논평에서 박근혜정부 2년을 평가하며 남측이 "북을 해치기 위한 대화만을 고집"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지난 2년간 남북관계가 줄곧 파국으로 치달은 것은 "현 남조선 당국의 구태의연한 대결정책과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 때문"이라며 "현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은 철두철미 북남관계 파괴정책"이라고 비난함.
 - 이어 "통일준비위원회·통일헌장은 체제대결을 제도화하려는 책동"이라며 "자유민주주의체제 하 통일 망상을 실현하려는 망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와 협력의 길이 열리겠는가"라고 반문함.
 - 또한 "지난 2년간의 엄혹한 현실은 남조선 당국의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북남 사이에 대화도, 관계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며 남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함.
- 북한, 한미연합훈련 비난...“예측못할 사태 초래”(2/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한미연합훈련 시작을 거론하며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조선반도에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함.
 - 통신은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은 훈련의 침략적 성격을 가리기 위해 전부터 훈련을 늦추겠다는 꾀변을 늘어놓았다"며 "하지만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 시작함으로써 그 꾀변마저도 부정하고 침략적 속심을 드러냈다"고 비난함.

- 북한 "남한, 기만적 대화 타령"…대북정책 비난(3/1, 노동신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 노동신문은 1일 1면 사설에서 "남조선 당국은 기만적인 대화 타령을 걷어치우고 동족끼리 손잡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그 무슨 통일대박론이나 통일헌법 조작 놀음으로는 북남관계와 조국통일과 관련한 어떤 문제도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대결만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함.
 - 특히 신문은 3·1절을 맞아 일제에 이어 미국이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체 조선민족이 반외세자주화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고 선동함.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도 1일 발표한 '남녘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미국이야말로 남녘 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재앙의 근원이며 우리 민족 모두의 첫째 가는 주적"이라고 주장함.
 - 호소문은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거론하고 북한이 "반미 최후결사전"에 돌입했다며 "북과 남은 힘을 합쳐 반미항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남녘 땅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정부, 北에 대통령 실명비난 즉각중단 요구(2/23, 연합뉴스)
 -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우리 최고 당국자에 대해 실명을 거명하며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임 대변인은 "특히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무례한 언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하며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며 군사적 위협을 하는 데 대해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무력도발이나 위협, 이런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軍 "한반도 방어 연례적 훈련, 남북관계와 무관"(2/23, 연합뉴스)
 -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키 리졸브 및 독수리(FE) 연습은 북한의 전면적인 도발, 남침 위협에 대한 방위 차원에서, 한반도 방위 차원에서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며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연례적 훈련은 남북관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 대변인은 또 "이런 방어적인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북한이 이를 가지고 또 도발을 하거나 또 다른 위협을 한다면 우리 군도, 우리 정부도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뉴스는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개성공단 최저임금 74달러로 5.18% 인상 일방통보(2/2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6일 통일부 당국자가 "북한이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월 최저임금을 3월1일부터 74달러로 정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임금인상 통보에 대해 26일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일방적인 노동규정 시행 통보에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수령까지 거부했다고 뉴스는 전함.
 - 이에 우리 측은 북한이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자 구두로 통지문을 읽는 방법으로 북측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전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동해서 구조한 북한 선원 2명 송환(2/23, 연합뉴스)
 - 통일부는 지난 12일 동해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2명을 23일 오후 1시

관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했음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정부 "대북전단 살포자제 공문 안보낼 것"(2/2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6일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단체들에 살포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공문으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필요성이 없다고 정부는 판단한다"고 밝히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공문보다도 정부 당국자가 직접 면담해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 류길재 통일부장관 발언('남북관계 제대로 풀지 못해 아쉬움 소회 및 北의 대화호응 촉구' 등)에 대해 남한 당국의 '북남관계 파국책임을 모면해보려는 망발'이라며 '對北정책 철회와 대화실현 위한 실제적 조치' 주장(2.24,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통준위' 위원장단 회의 발언('北은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야 함' 등)에 대해 '미국의 反北 책동에 편승, 우리(北)와 체제대결을 해보려는 것이 괴뢰집권자의 속심'이라며 "미국과 함께 가장 비참한 멸망을 안길 것"이라고 비난 위협 지속(2.24, 중앙통신·민주조선)
-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 등 관련 우리 정부에 '남북관계의 파국을 몰아오는 반공화국 인권모략과 뼈라살포소동을 걷어치워야 하며 동족을 모해하는 청탁놀음을 그만 둘 것'을 요구 및 '반미항전·평화수호' 투쟁 선동(2.25,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기자동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2.27)】 우리 대법원의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 폐간 결정에 대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라며 '박OO 패당은 민주와 통일을 주장하는 애국활동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말살함으로써 자기의 반통일적 대결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주장(2.27, 중앙통신)
- 北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 2월 27일 남한 대법원의 '자주민보' 폐간 결정을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정치테러사건, 반인권범죄행위, 北에 대한 도발책동'이라고 선동 담화 발표(2.27,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정부(대통령 '통준위' 회의 발언 등)의 '북한의 남북대화 호응촉구'에 대해 "북남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모든 대결책동(합동군사연습 등)이 종식되어야 대화와 관계개선의 중대한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책임 전가(2.27,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남조선 당국이 통치위기에서 권력을 유지해 보려고 보안법을 휘두르며 진보민주세력 말살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보안법은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2.28, 평양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한미 연합훈련 비난 공세…“통째로 수장할 것”(2/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반공화국 대결을 추구하는 자들은 비참한 종말을 고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연합훈련은 "스스로 화를 부르는 도발 행위"라며 "통째로 수장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함.
 - 신문은 한미연합훈련이 '북침 핵전쟁 망동'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북한이 최근 실시한 해상목표 타격훈련을 언급하며 미국 중순양함 볼티모어호를 수장했던 6·25전쟁 당시보다 북한의 공격 능력이 '백배, 천배로' 강해졌다고 선전함.
 - 이어 "바다에는 공동묘지가 따로 없다"며 남한이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전쟁을 도발하면 남녘의 온 바다가 호전광들의 죽음터로 화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함.
- 북한, 러시아 대변하며 미국 MD체제 비난(2/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제2의 냉전을 불러오는 미사일 경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책동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벌어진 반러시아 제재에 편승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은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를 제압하는 실용적인 수단 중 하나로 미사일방어체계를 보고 있다"며 미국의 사드 배치 목표는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주장함.
- 북한 "한미훈련은 침략연습…군사적 대응할 것"(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을 가릴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3월 초 실시되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함.
 - 또한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은 방어라는 간판 밑에 전쟁연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다가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침략의 아성을 잿가루도 남지 않게 죽탕쳐버릴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이 경고를 무심히 듣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역사왜곡 시도 일본의 낮가죽은 곰발바닥"(2/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반인륜적 범죄를 덮어버리려는 후안무치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에 과거 청산은 무조건 해야 하고 또 회피할 수 없는 법적 의무"라고 역설함.
- 신문은 미국 역사교과서 수정 시도는 "낮가죽이 곰발통(곰발바닥)같은 자들만이 꿰칠(지결일) 수 있는 후안무치한 망동"이라며 "인류 앞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어느 때든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를 부정하려 하는 최근 일본 정계 움직임을 지적하며 "일본 정객들의 도덕적 저열성이 완전히 혐악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신문은 비난함.

■ 북한 "국제유가 하락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 음모"(2/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원유가격의 폭락과 그 배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유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러시아와 이란,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책동에 광분하는 지배주의 세력의 모략과 음모" 때문이라고 분석함.
- 이어 "미국은 세계적인 원유가격 파동에도 이렇듯하지 않고 생산량을 계속 늘렸다"면서 이는 러시아, 이란 같은 다른 원유 생산국들을 제압해 미국의 세력을 확장하고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함.

■ 북한 "핵무기는 미국만이 갖고 있는 독점물 아니다"(2/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짓부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극단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오바마 일당의 비방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악착한 제재와 압박의 도수가 강화되는 것 만큼, 우리를 겨냥한 전쟁연습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는 것 만큼

정의의 대응도수를 무한정 높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함.

- 이어 "핵무기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위협하고 "대양 건너 먼거리에 미국 본토가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큰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한미연합훈련 비난...“예측못할 사태 초래”(2/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한미연합훈련 시작을 거론하며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조선반도에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어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은 훈련의 침략적 성격을 가리기 위해 전부터 훈련을 늦추겠다는 꾀변을 늘어놓았다"며 "하지만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 시작함으로써 그 꾀변마저도 부정하고 침략적 속심을 드러냈다"고 통신은 비난함.

다. 회담 관련

■ 황준국, 러시아 방문차 출국...북핵 5자 협의 마무리(2/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3일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4일 오전(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만나 북러 관계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3일 러시아로 출국했다고 보도함.

■ "북핵 6자회담 앞선 '탐색적 대화' 개최에 5자 공감"(2/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4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과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한 뒤 모스크바 주재 한국 특과원단에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러시아 측과 비핵화 대화(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집중적 협의를 했고 비핵화 대화 재개의 첫단추를 어떻게 끼울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고 25일 보도함.
- 황 본부장은 "지난 1월 한·미·일 3자 협의, 2월 초 한·중 협의에 이어 한·러

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5자 사이에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런 공통된 인식을 적절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것이며 북한이 이에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함.

- 황 본부장은 공통된 인식의 내용에 대해 "6자회담이란 본 협상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가 필요하다는 데 5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런 탐색적 대화를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여러 협의가 있었다"면서 "북한까지 참여하는 6자 차원의 탐색적 대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뉴스는 전함.

■ 5자, 6자회담 재개 로드맵 합의…北의사 조기타진 추진(2/2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을 뺀 6자회담 5개 당사국이 최근까지 진행된 연쇄 접촉을 통해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사실상 합의하고 이를 조기에 북한에 제시하고 북측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6일 보도함.
- 이는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5개국은 북한에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당장 제의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부분까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스는 전함.

라. 대미국

■ 미 하원 외교위원회 대북제재법안 만장일치 처리(2/28, 연합뉴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새로 상정된 대북제재 강화 법안(H.R. 757)을 만장일치로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세계물위원회, 북한에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초청장 발송(2/2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6일 "프랑스 마르세이유에 본부를 둔 세계물위원회가 지난주 위원장 명의의 4월 대구·경북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 초청장을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 북한 대표부를 통해 발송했다"고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유엔 "북한, 선박 이름 바꿔 제재 회피"(2/26, AP통신)
 - 2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북한 선적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소유 선박의 이름을 변경하고 나서 운항을 계속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6일 보도함.
 - 보고서는 "OMM이 소유했던 선박 14대 중 13대의 이름이 바뀌었고 소유권도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서 "OMM이 브라질, 중국, 이집트, 그리스, 일본, 말레이시아, 페루,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 있는 개인 및 기업과 일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이어 보고서는 청천강해운, 압록강해운 등 OMM이 만든 34개 페이퍼컴퍼니는

물론 최철호 OMM 부사장, 김영철 청천강해운 사장 등을 제재하도록 권고했으며 "식량, 농업, 의료 등 온전히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전함.

- 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 '대응조치 필요국가' 재지정"(2/28, 자유아시아방송)
 -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관련 '대응조치 필요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8일 보도함.
 - FATF는 성명에서 "북한이 작년 10월 서한을 보내 FATF와 함께 마련한 행동계획 이행을 약속했지만 아직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해 국제 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함.
 - FATF는 또 재지정에 따라 북한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있을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과 북한이 유발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금융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함.

자. 기타 국가

- 북한 리수용, 몽골 외교장관과 회담(2/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지난 23일 몽골에서 룬데긴 부레브수렌 몽골 외무상과 회담을 열고 쌍무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회담에는 양국 외무상을 비롯해 몽골 주재 북한 대사와 북한 주재 몽골 대사 등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함.

- '한일의정서' 체결(1904.2.23) 111주년을 맞아 '한일의정서는 일제의 강권과 위협, 강요에 의해 날조된 파렴치한 침략문서'라며 '일본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2.23, 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과 일행, 2월 22일 몽골 울란바토르 도착(2.23, 중앙방송)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의장), 2월 23일 이임 주북 라오스 대사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2.23, 중앙통신)

- 주북 러시아 대사(알렉사드르 마체고라), 2월 23일 自國 '조국수호자의 날'을 즈음하여 노광철(인민군 부총참모장) 등을 초대한 가운데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 마련(2.23, 중앙통신)
- 駐北 이란 대사(만수르 차보쉬), 2월 24일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궐 부위원장)·정영수(노동상)·김정숙(대외문화연락위원장) 등 초청한 가운데 김정일 생일(2.16) 즈음 연회 개최(2.24,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2월 24일 몽골대통령 및 수상과 각각 담화(2.25, 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北인권토론회'(워싱턴, 2.17) 진행 관련 '인권문제를 정치화, 국제화하기 위해 악을 쓰고 있는 것은 인권을 무기로 하여 우리(北)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자는데 있다'며 거듭 중단 촉구(2.25, 중앙통신)
- 김영남, 2월 19일 신임 그리스 대통령에게 축전(2.25,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박봉주(내각총리), 2월 25일 쿠웨이트 독립 54돌과 해방 24돌 즈음 국왕과 내각수상에게 각각 축전(2.25, 중앙통신·중앙방송)
- 日 민주당 소속 마에하라 의원의 발언(총련중앙회관 전매에 탈법행위가 있다) 관련 '일본의 사회여론을 오도하며 총련이 중앙회관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하려는 비열한 행위'라며 '北-日간 회담에 찬물을 끼얹고 야당 정치가로서 제 농의 몸값을 울려보려는 어리석은 기도'라고 비난(2.26, 중앙통신)
- 강석주(당중앙위 비서), 2월 26일 이임 주북 라오스 대사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2.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자칭 IS(이슬람국가) 해커의 美 중부사령부 해킹공격은 "악의 제국에 들이대는 단호한 징벌"이라며 미국을 "첫 국가급 사이버테러행위를 감행한 도발의 원흉, 악랄한 해커제국"이라고 비난(2.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에서 '다께시마(독도)의 날' 행사(2.22, 시마네현) 및 '독도영유권' 동영상 제작·배포(11개국 언어) 등 '일본이 독도강탈 야망이 도수를 넘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 경종(2.27, 중앙통신)
- 정의의 러시아당 위원장·러시아 자유민주당 위원장 및 브라질 공산당 전국위원장과 국제비서, 2월 11·10·14일 각각 김정은에게 '광명성질' 축전(2.27, 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美, 아태지역 군사력증강' 관련 '북조선이나 이란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연막'이라며 '지역 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한 동북아와 아태지역의 무력증강'이라고 주장(2.28, 중앙통신)
- 日 중의원 의원 '마에하라'가 예산위에서 총련중앙회관을 걸고든 것 관련 '총련중앙회관과 관련된 전매와 임대문제는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에 따른 보편적인 거래문제'라며 '제 몸값을 떨구는 망동을 자제하라'고 주장(2.28,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北 대표, 2월 2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론회에서 연설을 통해 '특정 상임이사국이 때로는 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하여 세계의 헌병노릇을 하려하고 있다'며 미국에게 '적대시정책 철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부당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주장(2.28, 중앙방송)
- '3·1인민봉기를 통해 세계는 일제야말로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최악의 무리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다'며 '일본은 역사를 거울로 삼고 자기 조상들의 과거사를 똑바로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비난(3.1,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당 중앙군사위 개최...“전투태세 갖춰라”(2/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회의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연설에서 "앞으로 미제와 반드시 치르게 될 전쟁수행 방식과 그에 따르는 작전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적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다 대응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독려하고 "인민군대의 정치, 군사, 후방, 보위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전시 환경에 접근시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어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여 군력 강화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전함.

- 김정은, 평양 삭섬 과학기술전당 건설장 시찰(2/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대동강 삭섬의 '과학기술전당'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건설 상황을 둘러보고 "과학기술전당 건설을 조선노동당 창건 일흔돌(10월 10일)까지 무조건 끝내야 한다"며 건설자들이 '평양 속도'를 발휘할 것을 당부했으며 "과학기술전당은 당에서 단단히 마음먹고 추진하고 있는 건설 대상"이라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의 27일 현지지도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오수용 당 비서, 한광복·한광상 당 부장, 리재일 제1부부장, 조용원·조태산 부부장이 동행한 것으로 전함.

- 김정은 "후손에 벌거숭이산 줄 수 없다...남벌 엄단"(2/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제1위원장이 '식수절'(3월 2일)을 앞두고 한 담화에서 "나무를 마구 찍는 것은 역적 행위나 같다"며 "나무를 망탕(마구) 찍는 데 대해서

는 그 어느 단위, 그 누구를 불문하고 단단히 문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이어 김 제1위원장은 "후대들에게 벌거숭이산, 흙산을 넘겨줘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고난의 행군 후과(나쁜 결과)를 가시고 후대(후손)들에게 만년대계의 재부를 물려주기 위한 산림복구전투에서도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리룡남 북한 대외경제상 23일 러시아로 출발(2/23, 조선중앙통신)
 - 리룡남 북한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경제대표단이 23일 평양을 떠나 러시아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리 대외경제상은 23일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하바롭스크를 거쳐 25일께 모스크바로 올라갈 예정인 것으로 전하며 이후 26일부터 사흘간 모스크바 일정을 보내고 중부 도시 카잔을 거쳐 3월 초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북한 인민무력부장 옷벗은 장정남 7개월만에 재등장(2/23, 조선중앙TV,연합뉴스)
 - 2014년 6월 우리의 국방장관 격인 북한 인민무력부장에서 물러난 이후 종적을 감췄던 장정남이 아직 군부 내 위상이 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뉴스는 조선중앙TV가 23일 내보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사진에서 장정남이 회의장 맨 앞줄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전하며 중앙TV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의 바로 앞에 놓인 명패에도 '장정남'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전함.
- 北리수용, 내주 제네바 군축회의에 첫 참석(2/26, 연합뉴스)
 -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차 스위스를 찾는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다음 주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CD)에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함.

- 이번 CD는 지난 1월 1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회기로 리 외무상은 다음 달 3일 오전(현지시간)에 북한 대표로 연설하는 것으로 북한 외무상이 CD에 참석하는 것은 리 외무상이 처음이라고 뉴스는 전함.

- 북한, 김기룡 노동신문 사장 조선중앙TV 사장에 임명(2/27, 연합뉴스,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사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 김기룡(75)이 조선중앙 TV 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뉴스는 노동신문이 27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전날 열린 '출판보도 부문 연구 토론회' 소식을 전하며 행사에 참석한 김기룡을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텔레비전 방송사 사장'으로 소개한 것으로 전함.
- 북한, 자강도당 책임비서 김재룡으로 교체(2/28,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군수공장 밀집 지역인 자강도의 당위원회 책임비서에 김재룡이 임명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중앙방송은 28일 화평1호 발전소 건설 소식을 전하며 "김재룡 자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조업사를 했다"고 밝힘.
 - 신임 김 책임비서는 2010년부터 평안북도 당위원회 비서로 일해왔으며, 2012년 3월에는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김일성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뉴스는 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빨치산' 오진우 추모회...세습 기여 강조(2/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 20주기를 맞아 군·당·정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5일 중앙추모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25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된 추모회에는 '빨치산 2세대'인 최룡해 당비서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용진 내각부총리 등이 참석함.
 -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추모사에서 오진우의 충정과 공적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것이

'인민의 숭고한 의무이자 도덕 의리'라고 말하고 "죽어도 버리지 않는 역척 불변의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오직 한 본새, 한 모습으로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었다"면서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도의 계승문제해결에 특출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빨치산 1세대' 오진우 추모하는 이유는(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혁명가의 생은 백옥같은 충정으로 빛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 전 인민무력부장의 사망(2월25일) 20주기를 맞아 그의 업적과 공헌을 찬양함.
 - 신문은 오진우에 대해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교시를 결사 관철"했다면서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선대 지도자들의 지시 집행의 "숭고한 모범"이라고 치켜세우며 "당과 수령을 변함없이, 순결하게, 끝까지 받들어온 오진우 동지의 삶은 우리 천만 군민의 거울"이라면서 김 제1위 원장의 영도에 따라 사회주의강국 건설 투쟁을 벌이는 현 상황에서도 그런 충성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함.
 - 이어 "오진우 동지처럼 (김정은) 원수님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 나가자고 신문은 촉구함.
- 북한, 과학기술 개발 독려... "과학자는 현대판 홍길동"(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총공격전의 승리를 앞당기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올해를 당의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구상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큰 걸음을 짚는 해로 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부문 과학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 시급하다며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일 너 일을 가리지 말고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함.
- 특히 과학자들이 '아늑한 연구실에 앉아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보내는 말공부쟁이'가 아닌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곳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대판 홍길동'이 돼야 한다며 과학자들에게 현장에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을 강조함.

- '조선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 1주년 즈음 '당의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회였다'며 '농수산과 축산을 3대축으로 한 인민 식생활 향상' 등과 '사상교양사업' 강화를 독려(2.25, 중앙방송·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새로 꾸린 근위부대관 시찰(2.28, 중앙방송·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90호(2.25), 「사회주의애국심 칭호, 모범산림군·시·구역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발표(2.28, 중앙방송)
- 화평1호발전소 건립 조업식, 2월 27일 김재룡(자강도 黨 책임비서)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2.28, 중앙방송)
- 김정일 저작(국립교향악단은 당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혁명적 예술단체이다, 2.27) 발표 10주년 관련 '지난 10년간 창작활동(피바다 등) 등 회고' 선전(2.27,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육아원·애육원 건설을 성의껏 지원한 일꾼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3.1, 중앙방송)
- '黨 중앙위 정치국 결정서와 黨중앙군사위 공동구호의 호소는 시대와 민족의 부름이 역사의 요구'라며 '조선 사람의 피와 땀을 지닌 사람이라면 통일애국위업에 한 몸 바쳐 나서야 한다'고 강조(2.28,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일 저작(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발표 22주년을 맞아 저작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우월성을 깊이 새겨주고 사회주의 신념을 더욱 굳게 심어주는 강령적 문헌'이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간직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3.1, 중앙통신·노동신문)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한, 관광과 자연보호의 조화 독려...생태관광도 강조(10/15, 김일성종합대학학보: 3/1,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4년 4호(10월15일 발행)는

'관광업의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평가방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평가 기법 개발을 주문했다고 전함.

- 논문은 "관광업의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환경보호사업을 잘 해나가는 것은 당 정책에 맞게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며 소음공해, 쓰레기 문제 등 관광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나열함.
- 논문은 "관광업의 발전은 물처럼 양적으로 제한돼 있거나 점점 줄어드는 자연자원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소음공해로 주변 생물의 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 이어 "환경평가 사업을 잘하면 관광으로 파괴된 환경을 복구할 때 적은 노동과 비용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며 "자연경치에 의존하는 관광 계획은 환경영향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함.
- 학보는 같은 호에 '생태관광의 출현과 그 발전추세'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도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관광'을 소개하며 자연보호와 관광의 조화를 거듭 강조함.

나. 주요 후속 조치

- 북한, 경제개발구 사업 본격 추진...“입주기업 선정”(2/2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3일 평양발 기사에서 김춘일 국가경제개발협회 처장의 말을 인용해 조만간 경제개발구 입주 기업을 선정해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전함.
 - 김 처장은 "지난 2년이 준비기간이라면 이제 실질적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개발총계획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나가려 한다"고 설명했으며 "13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총계획이 완성됐다"며 "나머지 경제개발구에 대한 총계획 작성 사업도 마감 단계"라고 말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함.
 - 이어 "현재 국내외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작년 4~5월 러시아, 캐나다, 중국, 인도, 필리핀의 경제·법률 전문가들이 청진, 와우도, 현동, 신평 경제개발구 등을 참관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 북한, 국제전람회 활성화...대외경협 확대(2/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6일 "조선국제전람사가 정례적인 전람회 이외에 부문별 전람회를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평양발로 보도하고 "올해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중국새기술제품전람회,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도이칠란드(독일)공업전람회가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소개함.
 - 이에 따라 북한은 기존 국제전람회 장소인 평양 3대혁명전시관과 인접하는 10만 m² 부지에 새로운 국제전람회장을 지어 행사를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고 조선신보는 전함.

- 북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전...“캠핑부터 농장체험까지”(2/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이례적으로 '조선의 매력적인 주제관광들'이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림.
 - 4분 길이의 영상은 관광지과 관광객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한 남성의 내레이션, 경쾌한 배경 음악으로 구성됐고 캠핑과 체육, 농장체험 등 외국인 대상의 관광상품을 소개함.
 - 영상은 "우리나라에 온 다른 나라 관광객들로부터 다양한 전문 주제관광들이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다"며 사례로 등산관광, 비행기애호관광, 자전거관광, 체육관광, 노동생활체험관광을 들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전문 주제관광 상품이 적극 개발해 국제 관광시장에 내놓겠다"고 강조함.

- 북한, 가뭄예방 시설공사 5만7천여개 완료(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가뭄 피해를 막고자 2014년 10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물 확보시설 5만7천670여개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 기간 저수지 수십개를 비롯해 우물 4만4천여개, 웅덩이 5천여개, 보막이 3천740여개, 저류지 1천400여개, 물주머니 900여개, 즐짱(물을 끌어올리는 관) 1천600여개 등 시설을 확보했다고 전함.
 - 특히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저수지 20여개, 우물 2만8천980여개, 웅덩이 3천30여개, 보막이 1천600여개의 시설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힘.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관계

- "러-북 교역 2020년까지 10억 달러로 늘릴 것"(2/24, 인테르팍스통신)
 - 인테르팍스 통신은 23일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리 무역상이 24일 하바롭스크주(州) 주도 하바롭스크를 방문해 세르게이 세트노프 부지사 등 주정부 인사들과 회담하면서 "지난해 우리는 양국 간 관계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채무 문제 타결 등 통상경제 분야 발전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며 "우리는 러시아 측과 2020년까지 양국 교역을 1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함.
- 러-북, 온성~나진 연결 150km 철도 개보수사업 추진(2/26, 연합뉴스)
 -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방문한 리용남 북한 무역상과 함께 2월 초 출범한 러-북 민간경제협력 기구 '비즈니스 협의회' 1차 회의에 참석한 뒤 "북한 측이 회의에서 남양(함경북도 온성군)~온성(함경북도 온성군)~나진을 잇는 약 150km 구간 철도를 개보수하는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에 러시아철도공사(RZD)가 이 사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함.
 - 갈루슈카 장관은 또 지난해 러시아와 북한이 합의한 북한 내 철도 현대화 사업(포베다/승리/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북한 측과 상세히 협의했다며 사업 주체인 러시아 컨소시엄사 '브릿지 그룹'이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평양~남포 구간 철도 설계 및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소개함.
 - 러-북 양측은 또한 현재 추진중인 러시아 극동 잉여 전력의 북한 나선특구 공급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뉴스는 전함.
- "EU 세계기아원조 내달부터 북한에 채소씨앗 지원"(2/27,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EU) 산하 독일의 대북지원단체인 세계기아원조가 다음 달부터 3년간

- 북한에서 채소 씨앗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세계기아원조 게르하르트 우마허 아시아담당국장은 26일 "EU 지원금 150만 유로(약 18억5천만원)를 투입해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채소 씨앗 생산·공급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재배 대상은 썩갓, 부추, 토마토, 청고추 등 북한에서 주로 재배하는 채소로 3년 뒤 북한이 연간 채소 35만kg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검은 고구마에서 천연색소 추출' 기술 확립 선전(2.23, 중앙통신)
- 北정부 경제대표단(단장 : 리룡남 대외경제상), 2월 23일 러시아 방문차 평양 출발(2.23, 중앙통신·중앙방송)
- 한천수산사업소 등 北 서해 각 수산사업소들의 지난해 대비 '30일 앞당겨 첫 출어 및 물고기잡이 계획 완수 총만' 선전(2.24, 중앙통신)
- 알곡·감자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며 축산을 발전시키고 과일생산을 늘리기 위한 2014년 농업부문 사회주의 증산경쟁총화모임, 2월 2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2.25, 중앙통신)
-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건설장비 및 기공구전시회, 2월 25일 평양에서 진행(2.25, 중앙통신)
- 체육과학연구토론회, 2월 26일 최룡해(당중앙위 비서)·김영훈(체육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의 청춘거리 역기경기관에서 진행(2.26, 중앙통신)
- 전국 지진 및 화산 부문 과학기술발표회, 2월 26일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평양에서 진행(2.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에서 '최근 10일간 수백 어로(漁撈) 성과 및 각 수산사업소들의 1·2월 어로 계획 10일 이상 조기 완수' 선전(2.27, 중앙통신)
- 희천9호발전소, 발전기 본체 조립 완료(2.28, 중앙방송·평양방송)
- 함남지구 탄광연합기업소, 2월 석탄생산계획 초과(102%) 수행(3.1,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에볼라 차단 위해 평양마라톤에 외국인 출전 금지(2/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관광 전문 고려여행사를 운영하는 닉 보너가 23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오는 4월12일 평양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에

북한 국민만 참가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함.

- 보너는 고려여행사에만 400여 명의 외국인이 대회 출전을 신청한 상태라고 전하며 "내달 말까지 에볼라로 인한 출전 제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마라톤 조직위는 여전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북한 내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속지지 않을까 봐 걱정한다"고 전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기금 설립... "교육사업 후원" (2/25, 내나라)

- 북한이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사업 후원을 위한 '김일성종합대학기금'을 설립했다고 내나라가 25일 밝힘.
- 내나라는 구체적인 기금 설립 시기는 밝히지 않았으며 이 기금은 세계 비정부기구와 해외동포의 자발적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자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액수를 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함.
- 기부자에게는 김일성종합대학 이사회 명의의 기부증서가 수여되며 북한 명승지를 돌아보는 기회도 제공된다고 내나라는 소개함.

■ 북한, 평양 고구려벽화 무덤 올해 복원 (2/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010년 평양시 낙랑구역에서 발굴된 고구려 벽화 무덤을 올해 복원할 계획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로철수 민족유산보호지도국 부국장은 인터뷰에서 "무덤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적지 않은 요소들이 마모, 소실된 상태"라며 "유적을 잘 보존하고 유실된 요소들을 옛모습 그대로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어 "무덤이 복원되면 유적 참관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탈북 여대생 "北에도 장마당 세대가 있어 희망적"(2/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5일 유엔 워치 등 20개 비정부기구(NGO)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최한 제7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 참석한 탈북 여대생 박연미 씨가 24일(현지시간) 제네바 국제 콘퍼런스 센터(CIGC)에서 열린 '독재에 대한 대항' 세션에서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을 탈출해 현재의 나로 존재하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 박 씨는 "김일성 사후 식량 배급체계가 무너졌고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암시장 밖에 없었다"면서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80년대와 90년대에 태어난 나의 세대는 규칙을 어기더라도 시장에 참여해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고 증언함.
 - 그는 또 "나의 세대는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를 차단하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을 통해 암시장에 들어온 여러 미디어를 통해 외부세계에 더욱 많이 노출됐다"면서 "외국 영화를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염색하기를 희망하는 등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다"고 전하며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장마당 세대는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으로 변하게 됐고, 이것은 북한 독재 정권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고 뉴스는 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도 황사에 '숨막혀'...올해 첫 경보(2/23,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북한 당국이 23일 올해 첫 황사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오후 "오늘 (낮) 12시 현재까지도 서해안 대부분 지역과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황사현상이 계속 관측되고 있다"면서 "이번 황사는 농도가 매우 세다"고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 역시 23일 오전 황사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와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집에 돌아오면 10% 농도의 소금물로 코 안과 목안을 씻어내는 것이 좋다고 권고함.
- **북한 의무교육 왜 늘었나…"영어와 컴퓨터교육 강화"(2/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5일 북한이 지난해 4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한 이후 달라진 교육 현장 분위기를 다룬 기획기사에서 새 제도의 도입 배경을 소개함.
 - 평양 갈림길초급중학교의 정명익 교장은 "소학교(초등학교)에서는 발전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영어, 컴퓨터 등 현대 추세에 필요한 과목들이 보충돼가면서 과목 수가 종전보다 늘어났다"고 말하며 소학교 학제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으로써 "과목들의 시간 수가 충분히 확보돼 학생들의 자립심과 창의성을 높여 주기 위한 '깨우쳐주는 교수'를 보다 철저히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함.
- **"북한 부유층 사이에 서양음식 인기"(2/25, 중광신문망, 중국신문사)**
 - 중국신문사는 25일 대만 중광신문망(中廣新聞網)을 인용해 북한 평양과 지방의 신흥 부자들이 평양 시내를 거닐며 쇼핑을 즐길 때 고급 양식을 파는 음식점을 애용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 매체는 북한 부유층의 입맛이 점점 고급스러워지고 있으며 북한 매체도 이런 현상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는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소개하며, 평양과 각 도(道)에 분원이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요리학원인 중앙요리학원도 현재 이런 추세를 반영해 수강생들에게 풍뎉, 파스타, 스테이크 등 신흥 부유층이 좋아하는 양식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함.
- **"미국 과학자들, 올해도 북한과 학술교류 계획"(2/26,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과학자들이 올해도 북한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 서현진 미국 캔자스대 교수는 최근 캔자스대 방송 인터뷰에서 "7년간 이어온 북한 과학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올해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과 북한 과학자들의 학술교류가 이어지면 두 나라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 영재학교 학생 1~2인당 노트북 1대씩 할당"(2/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6일 평양의 영재학교인 모란봉제1중학교에서 "노트컴(노트북)은 수업에서 사용할 경우 학생 1~2인당 1대씩 할당된다"며 "교육 선진국에서는 학교들에서 1인당 1대의 정보단말기를 배비하는 것이 추세"라고 강조하며 교실마다 벽걸이형 디지털TV와 노트북을 갖췄다고 소개함.
 - 이어 "모란봉제1중학교는 교육 환경과 교수 과정을 정보화하는 데서 앞장 서고 있다"며 북한에서도 '주입식·암기식' 교육의 병폐가 지적되고 있고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정보통신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교실 교육의 고정 격식화된 틀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전함.

- 평안북도 신의주시, 체육관(3층 건물) 새로 건설(2.26, 중앙통신)
-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2.4, 개막) 폐막식, 2월 27일 평양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진행(2.27,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남녀 축구팀들, 올해 여러 국제경기들 참가 예정(2.28, 중앙통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한, 2020년까지 핵무기 최대 100개 제조" (02/25, 연합뉴스)
 -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찬 브리핑에서 북한이 현재 핵개발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분석함.
 - 위트 연구원은 "이대로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한다면 2020년에 가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며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지금 한국 정부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한 국가와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며 "제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미국 '제한적 전쟁' 대비해야" (02/26, 연합뉴스)
 -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벤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선제적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그는 "북한은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함.
 - 아울러 그는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우리는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북한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적인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함.

- "북한 붕괴되면 6자회담 당사국 이해관계 표면화" (02/26, 연합뉴스)
 -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주최 강연회에서 "북한이 붕괴되면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표면화할 것"이라며 "미국은 각국의 우선순위를 민감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 붕괴 상황이 닥쳤을 때 남북통일을 비롯한 정세 변화를 다루기 위해 한국의 주변국 특히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며 "미-한-중 3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금부터 중국과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그는 "미국은 현재 북한의 무기용 핵분열 물질이 과격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에 팔려나가는 것을 포함한 핵 확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임.

- 5자, 6자회담 재개 로드맵 합의...北의사 조기타진 추진 (02/26, 연합뉴스)
 -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 당사국이 최근까지 진행된 연쇄 접촉을 통해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사실상 합의하고 이를 조기에 북한에 제시하고 북측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5개국은 북한에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당장 제의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부분까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짐.
 - 그러나 북한은 핵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하겠다는 병진 노선을 강조하는 등 핵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나아가 북한이 강도 높게 반발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돼 성과가 불투명함.

- 미·중 "북한 핵·경제 병진노선 성공 못해" <백악관> (02/26, 연합뉴스)
 -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뉴욕 회동 결과를 전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함.
 - 라이스 보좌관과 양 국무위원은 북한 문제와 함께 이란, 아프가니스탄, 글로벌 보건안전, 대(對)테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사이버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이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짐.

- 서먼 미국무차관 "북한,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인정못해" <백악관> (02/28, 연합뉴스)
 - 웬디 서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을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힘.
 -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재고가 늘어나면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 데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입장표명임.
 - 서먼 차관은 또 "북한의 경제모델은 실패로 판명났으나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하는 것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우려해 이를 고수하고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약점을 감추려면 주먹을 쥐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고 비판함.

나. 미·북 관계

- "미국 과학자들, 올해도 북한과 학술교류 계획" (02/26, 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07년부터 스투어트 토슨 시라큐스대 교수 등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소속 학자들이 진행해온 북한 과학자들 초청 학술교류 행사가 올해도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함.
 - RFA는 2002년과 2004년에는 미국 과학자 20여명이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방문했으며 2001~2005년에는 이 대학 연구진이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다고 덧붙임.

다. 중·북 관계

- 중국, 북한 접경 라오닝성 어선에 블랙박스 설치 (02/25, 연합뉴스)
 - 신화통신은 북한 접경 지역을 관할하는 라오닝 변방총대가 올해부터 북한과의 어업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라오닝(遼寧)성의 어선들에 '선박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보도함.

- 북·중 간에는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탓에 별도의 어업 경계선은 정해진 것이 없고 또 북한은 50해리(75km), 중국은 12해리를 영해로 규정하는 탓에 중국 어선이 고기를 쫓아 동진하다 보면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중국 당국은 앞으로 블랙박스 가 설치된 자국 어선의 위치 확인과 운항 경로 조사는 물론 입출항시 자동 검역신호가 가능해져 접경 지역 관리·통제와 어민 안전·재산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북·중관계 풍향계' 중국 단둥 부동산 시장 침체 (02/27, 연합뉴스)
- 중국 전강만보(錢江晚報)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자국 최대 국경도시인 랴오닝(遼寧)성 단둥의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함.
 - 인구 250만 명의 단둥은 철도와 도로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입되는 화물량이 북중 교역총량의 70~80%에 달하는 양국 간 최대 교역 거점이며 북·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북·중관계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음.
 -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북·중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고 양국 경협도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단둥의 부동산 시장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라. 일·북 관계

- 일본, 북한에 제재연장 검토 통보...협상 진전 '압박' (02/27,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 측에 수출입 전면금지를 비롯한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의 연장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북·일관계 소식통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 앞서 작년 5월 일본과 북한이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 1년간으로 합의한 납치피해자 재조사 기한인 올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고령화한 납치피해자 가족은 재조사 행방에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이에 따라 일본 측이 대북제재 연장 가능성을 흘려 교착상태에 있는 재조사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지닌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북 ‘신형’ 대함미사일 놀랄 일 못돼” <미 전문지> (02/23, 연합뉴스)
 -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23일(현지시간) "Kh-35 또는 KN-09로 불리는 새 미사일이 실전배치 됐더라도 한국 해군의 '하푼' 미사일과 대등한 전력이 될 뿐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이달 초 공개한 '신형' 대함미사일로는 현재의 남북한 간 전력 격차를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함.
 - 또한 북한이 '스텔스 형상' 고속정을 새로 공개하는 등 전력 강화 시도에 나서고 는 있지만, 북한에서 우위를 보이는 잠수함이나 고속정이 해상억지력 측면에서 갖는 가치는 제한적인 수준이고 전반적인 해상전투력은 여전히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함.
 - 따라서 북한이 지역 또는 세계 안보에 가하는 가장 큰 위협은 현재 12개로 추정 되는 보유 핵탄두 개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과, 신뢰성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라고 지적함.
- WP 사설, 국제사회에 北 인권문제 해결 촉구 (02/23, 연합뉴스)
 -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리가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사설은 "인권 범죄를 저지른 북한의 지도자들을 안보리가 ICC에 회부하는 것은 응당한 조치"라며 만약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양국이 "김정은과 그의 '깡패 집단'의 보호자라는 걸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함.
 - 사설은 또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 조치는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조사 사무소를 운영할 적절한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한·미연합훈련 중단, 남북관계 개선 도움 안돼" <미 전문가> (02/28, 연합뉴스)
 -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 양국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연합훈련을 중단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함.
 - 토콜라 부소장은 "군사 도발이 종종 오판에 의해 발생한다"며 "군사 훈련은 상대방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유혹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세의 안정성을 높인다"고 설명함.
 - 아울러 그는 북한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을 트집잡는 데는 연합훈련 중단이 한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약화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 "MD는 중국 견제용 아냐" 공개 해명 (02/23, 연합뉴스)
 -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미국 핵과학자협회 연설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억제 전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힘.
 - 로즈 차관보는 특히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 체계인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GMD)를 거론하며 "북한과 이란의 ICBM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대규모의 정교한 무기를 막을 의도가 없고 역량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함.
 - 한편 그는 중국이 미국의 GMD 확대를 명분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판 GMD'를 거론하며 "미국의 억제 전략을 거스르지 않는 제한적 본토 방어용으로 판단되며 지역 안정을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 중국의 공격적 MD 투자를 견제함.
- 한민구 "사드 도입계획 없다...美 요청도 없어" (02/25, 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5일 미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도 없고, 따라서 (미국과) 협의한 바도 없고 도입할 계획도 없다"고 말함.

- 한편 한 장관이 주한 미군이 사드를 자체 반입해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드를 직접 도입하지는 않되, 주한 미군의 배치는 현실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부 방침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음.

■ 미 '과거사는 덮고가자'...한·중·일에 작심하고 촉구 (03/01, 연합뉴스)

-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 기조연설자로 나온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한·중·일 3국 모두 과거사 갈등에 책임이 있다며 비판하면서 북한문제와 같은 역내 공통현안을 놓고 다시 힘을 모으자고 주문함.
- 셔먼 차관의 이 같은 언급은 동북아의 과거사 갈등 해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정리된 형태로 보여준 것으로 당초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한 해법에 분명한 방점이 찍혀있었으나, 이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양비양시론'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됨.
- 이에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의회 연설을 통해 '어정쩡한 사과'를 표명하면 미국은 이를 토대로 한국에게 양보를 하도록 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음.

나. 한·중 관계

■ 한·중·일 다음주 서울서 차관보급 회의...협력복원 탄력 (03/01, 연합뉴스)

-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한중일 3국이 외교장관 회의 개최를 앞두고 서울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함.
- 2012년 4월 중국에서 개최된 이후 거의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외교장관 회의의 핵심 의제는 3국 정상회의 개최 등 협력 복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다. 한·일 관계

- 성김 "한·일, 전략적 이해 커 결국 화해할 것" (02/25 연합뉴스)
 -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동아태 부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이해가 너무 커 결국에 화해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초 신년 회견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과 관련한 담화를 전체로서 계승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민주적이고 책임있는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진정으로 화해를 촉진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쪽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함.
 - 또한 그는 "실제로 미국은 일본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매우 염려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안정적으로 건설적인 관계는 단순히 두 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지역의 이해와 직결된다"고 강조함.

- 日정부 근로정신대 199엔 '지급모욕'...정부 소극 대응도 한몫 (02/25 연합뉴스)
 -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두 번째 청구한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수당 지급 요청에 일본정부가 우리 돈으로 2천원도 되지 않는 199엔(1천854원)을 지급,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지난 2009년 1차 요청 때 지급한 '99엔'에 이어 두 번째 치욕을 안김.
 - 그러나 기만적인 액수의 지급이지만 후생연금 지급결정은 일본 측이 그동안 부인했던 강제동원사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일본정부가 부정한 개인청구권 유효성을 스스로 인정한 의미를 지님.
 -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우리 정부가 최근 사법부의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사인(私人)간 소송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 발 빼는 소극적 대응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판함.

- 이병기 특비서실장 체제...박근혜-아베 '간접 핫라인' 생기나 (02/27 연합뉴스)
 - 불과 8개월 전까지 주일본 한국대사로 근무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27일 청와대 비서실장에 내정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이의 간접 소통이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음.
 - 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게 될 이 내정자의 역할이 주목받는

것은 그가 주일대사 시절 아베 총리의 복심으로 꼽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임.

- 스가 관방장관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내정자에 관해 "주일대사 시절에 한일 관계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나도 매우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한일 관계를 위해 힘써줄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고 전함.

■ **차대통령 "한·일, 미래 50년 동반자로 새역사 써나가야" (03/01,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과거 독일과 프랑스가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유럽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보다 성숙한 미래 50년의 동반자가 돼 새 역사를 함께 써나가야 할 때"라고 말함.
-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인식 개선을 촉구하면서 광복 70주년과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됨.
-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문제를 "반드시 풀고 가야할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시도가 계속되는 것도 이웃관계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미국 정부, 중국의 대미 투자 집중 감시 (02/27, 연합뉴스)**

- 외국인투자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검토하는 미 정부 산하 외국인투자 위원회(CFIUS)는 2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2013년 한 해 97건의 외국인 대미 직접 투자를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약 20%인 21건은 중국 기업·개인이 제안한 투자였다고 밝힘.

- 미국 상무부가 집계한 대미 FDI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조사 건수는 미국이 중국의 FDI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
 - 최근 중국 안방(安邦) 보험이 뉴욕의 최고급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매입하는 거래를 CFIUS로부터 승인받는 등 중국의 대미 FDI는 확대추세이며 앞으로 미-중 양국간의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FDI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미 첨단 초계기, 남중국해 정찰비행" <필리핀 언론> (02/28, 연합뉴스)
- 필리핀이 최근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가운데 필리핀의 전통 우방 미국이 첨단 초계기를 동원, 남중국해 정찰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공세를 강화하자 주변의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필리핀과 공유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미 해군은 이들 초계기가 필리핀 주변해역에서 다양한 역량을 과시했다며 이를 통해 우방과의 협력관계가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함.
 - 이에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해 필리핀, 베트남 등 당사국들의 영유권 주장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음.

바. 미·일 관계

- 아베, 미국 의회 연설대 설ծ...'반쪽사과' 우려 (02/23, 연합뉴스)
-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2일(현지시간) "최근 일본을 방문한 연방의회 대표단에 아베 총리가 의회연설에 대한 적극적 용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의 분위기도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고 밝힘.
 - 과거사를 이유로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미 정치권 내부의 기류에도 불구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일본의 역대 방위부담을 늘리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개정을 위해서 아베 총리의 연설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이번 연설이 미국에만 사과하고 주변국들에 끼친 상처와 아픔은 언급하지 않는 '반쪽 사과'에 그치고 TPP 협상 완료와 가이드라인 재개

정을 토대로 새로운 '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과거사 이슈 자체를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미국 "아베 美의회연설, 행정부와 의회 간 논의" (02/24,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행정부와 의회의 당국자들이 앞으로 협의할 문제"라고 밝힘.
 - 지금까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 일본 총리는 요시다 시게루(1954년), 기시 노부스케(1957), 이케다 하야토(1961년)로 아베 총리는 일본총리 사상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시민참여센터와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등 한인단체들은 아베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 의회연설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일본 정부 "미국 내 군위안부 소녀상 설치 매우 유감" (02/25, 연합뉴스)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를 상대로 '군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제기한 일본계 단체의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된데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 지금까지의 노력과 완전히 배치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밝힘.
 - 또 그는 "글렌데일 시를 비롯해 미국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평화와 조화 속에서 공생하는 자치단체에서 출신 국가(한국·일본) 사이에 의견이 전혀 다른 위안부 같은 안건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케리 미국 국무장관, 다음달 중순 일본 방문" <NHK> (02/25, 연합뉴스)
 - NHK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중순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함.
 - 케리 국무장관은 기시다 외무상과의 회담 때 4월 말~5월 초인 일본 '황금연휴' 기간에 있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국 방문 및 미일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가속화,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테러 세력에 대한 대응 등 현안들도 미일 외무장관 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임.

- "미국, 일본에 무라야미담화 표현 계승 요구" <요미우리> (02/26, 연합뉴스)
 -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여름에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와 관련해 무라야미(村山) 담화(전후 50주년 담화)의 역사인식 관련 문구를 계승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함.
 - 미국 정부는 중·일 및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일본에 이 같은 요망을 물밑에서 전달하고 있으며 요미우리의 취재에 응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요구의 허들(기준)은 높다"며 "새로운 담화에서 과거 담화의 중요 부분을 빼기 어려울지 모른다"고 전함.

- 日자위대, 美해병대와 대규모 낙도탈환 훈련 (02/26,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미국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군 수륙 양용차 'AAV7'을 활용한 대규모 낙도 탈환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함.
 - 이번 훈련에 투입된 AAV7은 강습상륙함에서 부대를 해변으로 전개할 때 이용하는 수륙양용 장갑차로 미국 해병대가 30년 이상 주력 장비로 사용해왔으며 일본은 낙도가 침공당한 경우 이 장비로 신속하게 상륙, 섬을 탈환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음.
 - 양측의 이번 훈련은 중일간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한 미일 공동의 방어 태세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훈련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됨.

사. 미·러 관계

- 미국-러시아, 유엔 무대서 국제이슈 놓고 설전 (02/24, 연합뉴스)
 - 서맨사 파워 주 유엔 미국 대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각료급 회의에서 이슬람국가(IS) 공습과 시

리아·우크라이나 내전 등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움.

-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이 주도한 국제적 군사행동을 겨냥해 미국의 일방적인 무력 사용을 비판했으며 이밖에 미국이 일방적인 군사행동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혼란으로 몰아가 오히려 극단주의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함.
- 이에 대해 파워 대사는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막고 우크라이나 반군을 지원하는 점을 들어 반박했으며 러시아 정부를 향해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외국의 강대국만 탓하기보다는 평화·안보·번영의 기초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라"고 비판함.

■ 美·EU "러 평화협정 준수 않아"…추가 제재 경고 (02/26,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러시아가 아직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협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취약해진 경제에 부담을 더하는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경고함.
-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날 유럽의회에서 휴전협정이 발효된 지난 15일 이후 800건의 위반이 발생했다며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이 무산되면 러시아와 분리주의 반군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EU는 지금까지 러시아의 개인 151명과 단체 37명에 대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음.

아. 중·일 관계

■ 중국, 일본 요나구니섬 자위대 배치 행보에 '경고음' (02/23, 연합뉴스)

-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중국중앙(CC)TV, 경화시보(京華時報) 등은 22~23일 일본 오키나와(沖繩) 요나구니(與那國)섬에서 22일 열린 육상자위대 연안감시 부대 배치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 찬성(632표)이 반대(445표)보다 많은 것을 보도하며 일본당국의 자위대 배치 계획이 "사실상 승인받았다"고 보도함.
- 이어 경화시보는 중국 외교부는 예전에 요나구니섬 자위대 배치 계획에 대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진지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중국이 일본의 이번 행보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함.

- 요나구니섬은 대만에서 동쪽으로 약 110km, 센카쿠 열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 분쟁에 대비하고 중국군의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기 위해 요나구니섬에 자위대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
- 중국 외교부장 "침략 사실 뒤집으려는 이들이 있다" (02/25, 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에서 "당시 공인된 반파시스트전쟁(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심지어 침략(행위)을 뒤집어 죄행을 벗어나려는 이들이 있다"고 비판함.
 - 이러한 발언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역사수정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됨.
 - 이와 관련, 토론회에 일본을 대표해 참석한 요시카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유엔 대사는 "일본은 유엔에 가입한 이래,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함.
- "일본, 중-일관계 개선위해 3천명 방중단 파견" (02/25,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중국일보(中國日報) 인터넷판은 25일 일본 NHK방송 보도를 인용,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총무회장이 최근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오는 5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대규모 방문단을 중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함.
 - 니카이 회장은 '중일관광문화교류단'이라는 이름의 이 방문단이 일본 민간 기업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도자 등 3천 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5월 하순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 니카이 회장은 "중일관계의 교착 국면을 타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양국 정상이 웃으며 악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함.
- 중국 "역사반성 태도 보여야"...대일공세 강화 (02/25,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25일 "우리는 일본이 올해와 같은 특수한 해에 정확한 인식을 하고 역사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중국은 올해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열병식 등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도 일본에 대한 역사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중국 각료 3년 만에 일본 방문 조율 중" <아사히> (02/27, 연합뉴스)

- 아사히(朝日)신문은 리리궈(李立國) 중국 민정부장이 다음 달 14~18일 일본 센다이(仙台) 시에서 열릴 예정일 유엔 방재(防災)세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방문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리 민정부장이 참석하면 중국의 현직 각료가 3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는 셈이며, 중·일 각료회담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자.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외무상 유엔 첫 연설…“北 인권문제 반박”(데일리NK, 2.25)
 - 북한 이수용 외무상이 다음달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반박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 북한 외무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남북 고위당국자들이 참석하는 만큼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될 전망이다.
 - 지난해 말 북한은 북한 인권 상황 관련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고 책임자를 겨냥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김정은과 북한정부를 붕괴시키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음.
 - 북한 외무상의 이번 행보는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온 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강도가 강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됨.

- 북, '태양절 선물'로 새 교복 공급(자유아시아방송, 2.25)
 - 북한이 소학교부터 대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옷설계(디자인)를 바꾼 교복을 오는 '태양절 선물'로 학생들에게 공급예정이라고 함.
 - 국경 연선에 나온 평양의 한 주민소식통은 "교복공급을 위해 김정숙방직공장을 비롯한 모든 방직공장(평양방직, 신의주방직, 사리원방직, 함흥방직 등)과 이를 가공해야 하는 모든 피복공장(의류제조공장)들이 만가동(풀가동) 상태"라고 밝혔다.
 -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지난 22일 '수백만의 학생들이 받는 새 교복'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봄, 가을, 겨울교복과 함께 여름교복이 동시에 안겨진다"고 보도해 1인당 2벌의 교복이 지급된다는 점을 시사했음.
 - 이와 관련 중국의 대북 관측통들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학생에게 한꺼번에 공급하는 교복 선물은 김정일 시대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로 김정은 제1비서의 인민사랑을 내세우기 위한 행보"로 평가하고 있음.

- 북 특별경비기간 강력범죄 오히려 늘어(자유아시아방송, 2.25)
 - 새해를 맞으며 북한 사법기관들이 범죄자 소탕을 위한 '100일 전투'에 돌입했지만 오히려 강력범죄는 더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복수의 함경북도 소식통들은 밝혔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담당 보안원의 아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체포되는가하면 동사무소 일꾼들까지 주민들의 돈을 떼어먹은 사실이 적발돼 온 청진시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앞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 '특별경비' 기간을 선포했음.
 - 2월 9일 청진시 청암구역 락향동에서는 함경북도 김책시 성진제강소의 간부 2명이 독살되었는데 그 범인은 락향동 담당보안원(경찰)의 아내로 밝혀졌음.
 - 이들 간부는 평소 담당보안원의 아내와 마약거래를 해왔는데 국가보위부의 수사에 걸려들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가, 담당보안원의 아내가 이들에게 아버지 산(청산가리)을 넣은 순대를 먹여 독살했다는 것임.
 - 그런가 하면 "'특별경비' 기간인 2월 11일에도 김책제철소 당위원회 지도원 박성일(37살)이 강도들에게 맞아 자전거와 동복을 빼앗기고 사망했다"고 전해졌음.

- 북한,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남북관계 줄곧 파국"(연합뉴스, 2.26)
 - 북한은 26일 박근혜 정부가 취임 후 2년 동안 북측을 대화가 아닌 '변화'의 대상으로만 여긴 탓에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다고 비난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신뢰의 간판 밑에 대결을 격화시킨 반통일죄악의 2년'이라는 제목의 장문 논평에서 남측이 "북을 해치기 위한 대화만을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현 남조선 당국이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제도통일"이라면서 "그것을 실현할 흥심 밑에 북남대화에 사사건건 장애를 조성하였다"고 규정했음.
 - 북한은 이어 "통일준비위원회·통일헌장은 체제대결을 제도화하려는 책동"이라며 "자유민주주의체제 하 통일 망상을 실현하려는 망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와 협력의 길이 열리겠는가"라고 반문했음.
 - 신문은 또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함께 남측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북한인권법 추진, 탈북자 전단 살포 '비호 두둔' 등 안팎으로 '반공화국 인권 모략 책동'

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북, 국제비난 의식 자체 인권법 준비"(자유아시아방송, 2.27)
 - 북한이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음.
 - 북한은 우선 장애인과 아동, 여성 등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음.
 - 24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마키노 요시히로 연구원에 따르면,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 일행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음.
 - 리 부상은 북한이 '강제수용소' 문제를 제외하고서만 국제사회와 인권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인권단체 및 기관과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음.
 - 더불어 그는 북한이 앞으로 마루스키 다루스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이는 다루스만 보고관이 최근 언급한 '북한정권이 교체된 뒤에야 수용소에 갇힌 정치범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방북초청이나 대화제안을 철회한 것임.
- 北보안원, 출세 위해 멀쩡한 부인과 이혼한다는데... 소식통 "가족 중 탈북자 있으면 능력 있어도 승진 안돼" (데일리 NK, 3.1)
 - 북한 당국이 최근 가족 중 탈북자가 있거나 의심되는 당정(黨政) 간부들의 승진에 제한을 두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음.
 -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올 초부터 간부들에 대한 신원조회, 즉 가족 중 탈북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했고, 혹시 행방불명자나 탈북자가 있는 간부들은 없어진 가족에 대해 가짜 '사망진단서'까지 발급하게 했음.
 - 소식통은 "보안, 보위부 같은 권력기관의 간부 사업은 사돈에 팔촌까지 신원조회가 이뤄지고 있어 (인사이동) 관련자들이 '보지도 못한 먼 친척들 때문에 내가 왜 피해를 입어야 하나'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한다"면서 "정치대학에 가려던 한 보안원은 아내의 이복 고모들이 탈북한 것 때문에 출세길이 막히자 아내와 이혼까지 했다"고 말했음.

- 소식통은 "간부 재정비 사업이 당·군은 물론 행정부문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간부 재정비 사업으로 전국에서 많은 인재들이 승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2. 북한 인권

- WP,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문제 해결 촉구(YTN, 2.23)
 -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음.
 - 신문은 사설에서 1년 전 북한 인권조사 위원회의 조사로 실체가 드러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리가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권 범죄를 저지른 북한의 지도자들을 ICC에 회부하는 것은 응당한 조치하면서 만약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양국이 '깡패집단'의 보호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음.
 - 또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계 조치는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조사 사무소를 운영할 적절한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커비 前 북한인권조사위원장 "인권보고서, 北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한국에 '초당적 관심'도 촉구(조선일보, 2.23)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발표된 북한인권 조사보고서를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전 세계가 COI 보고서에 관심이 많지만, 가장 큰 우려 대상인 북한 주민들은 접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정부가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음.
 - 커비 전 위원장은 이날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보편적인 관심도 촉구했는데, "북한 인권 문제는 초당적 사안"이라며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진보 진영 인사들을 충분히 보지 못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보수 진영뿐

아니라 진보 쪽 인사들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호주 연방의회, 북한인권 개선 결의안 첫 채택(미국의소리, 224)
 - 호주 연방하원이 23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 결의안을 발의한 크레이그 론디 의원은 이날 하원 전체회의 제안설명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 호주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그동안 COI의 변함없는 지지자였다고 말했다.
 - 특히 호주는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과 반인도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COI의 요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론디 의원은 말했다.
 -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세계 인권표준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호주 정부가 북한 당국에 계속 요구할 것을 촉구했음.
 - 아울러 호주 정부가 북한에 한국과의 의미 있는 양자 회담, 그리고 북 핵 6자회담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을 명시했음.

- 마이클 커비 "중·러, 북한 인권문제 형식적 접근"(연합뉴스, 225)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이 '형식적'이라고 비판했음.
 - 커비 전 위원장은 25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주 형식적인 입장이고 결코 인권을 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음.
 - COI가 북한 인권유린의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중국과 러시아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문제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증거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임.
 - 커비 전 위원장은 COI 조사 과정에서 중국이 걸으려는 "지극히 정중하고 공손하게" 대해줬지만 COI의 북중 접경지역 방문을 불허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기도 했음.

- 국제 앰네스티 "북한, 구조적 인권침해 여전"(YTN, 225)
 - 국제 앰네스티는 '연례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우 여전히 구조적인 인권침해

가 자행되고 국경통제가 눈에 띄게 강화됐다고 밝혔음.

-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2011년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뒤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 수가 크게 줄었고 전파방해장치 등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 강화로 국경을 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 또 수백 명이 수용시설에 구금돼 고문을 당하거나 장시간 강제노동 등 부당대우를 받고 있고 외국인 역시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당했다고 지적했다.
- 이외에도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에서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문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 정부가 문을 열고 국제 인권단체들과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

■ 체코 총리 "北 인권 지키고자 압력 가할 것"(연합뉴스, 2.25)

- 방한 중인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25일 "체코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음.
- 소보트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북한 체제는 비민주적이고 바깥 환경에도 움직이지 않는 강경한 체제"라며 "어렵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북한 체제가 빨리 정상적이고 국제적인 무대에 올라서서 한 일원이 되도록 희망하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음.

■ 또 미뤄진 北인권법...4월국회선 입법되나(연합뉴스, 3.1)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논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됨.
-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로 선출된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외통위원장이 북한인권법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면서 새로운 상황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새정치연합은 '안 되는 것은 빼고 처리할 수 있다'는 기조 아래 외통위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내용을 기초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11월24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은 연말을 넘긴데 이어 3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해 사실상 처리가 물 건너가 4월 임시국회를 다시 기약해야 하는 상황임.

-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임 유기준 외통위원장의 마통을 이어받은 나경원 신임 외통위원장의 역할도 주목됨.
- 나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선출된 직후 "여야가 머리를 맞대 10년간 미뤄온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나 위원장은 당 지도부 일각에서 제기한 북한인권법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오래 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가도 19대 국회에서 못할 수 있다"면서 선을 그었음.
- 외통위는 전체 23명의 소속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14명으로 '5분의 3'(13.8명)을 넘어 여당 위원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야당의 격한 반발이 예상됨.

3. 탈북자

- 탈북자들 제네바 인권회의서 북한인권 참상 증언(미국의 소리, 2.25)
 - 북한 해외 노동자 출신의 탈북자 임일 씨와 탈북 대학생 박연미 씨가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인권회의에서 연설했음.
 - 이날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인권감시기구 '유엔워치' 등 20여개 국제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7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 참석한 임일 씨는 노예처럼 일하는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실태를 고발했음.
 - 지난 1996년 쿠웨이트에 파견된 임 씨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했다고 말했으며, 특히 북한 현지 지도원들의 요구 때문에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밤 12시까지 연장근무를 해야 했다고 함.
 - 임 씨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하면서 회사에서 지급된 월급을 북한 정부가 모두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 탈북 대학생 박연미 씨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70년 간 김 씨 독재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억압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 수 십만 명의 주민들이 기아와 고문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음.
 - 박 씨는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에 대해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음.

- 미 유엔대사 탈북자 면담 "북한 주민 고통 끝내기 위해 노력"(미국의 소리, 2. 27)
 -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대사가 최근 뉴욕 유엔본부에서 탈북자 2 명과 만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 파워 대사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거주하는 조셉 김 씨와 한국에서 방문한 탈북자 주찬양 씨를 지난 13일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파워 대사는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외부 세계가 모른다고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 수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 증언했고, 세계는 위성사진을 통해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임.
 - 한편 이날 면담에서 조셉 김 씨와 주찬양 씨는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과 탈북 과정, 그리고 정착할 때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김 씨는 북한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며,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지난 2010년 탈북한 주찬양 씨도 북한 주민들에게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계속 꿈을 갖고 있으면 가까운 장래에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4. 이산가족

- 박 대통령, "北, 매년 4000명 이산가족 세상 뜨는 비극 외면 안돼"(연합뉴스, 3.1)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매년 남한에서만 4000명 가까운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뜨고 있는 비극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박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에서 "무엇보다 남북 이산가족들의 절절한 염원을 풀어드리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이어 "부모 없는 자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듯이 북한도 내부의 인간적인 혈연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의 정례화, 서신교환 등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협의를 조속히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 또한 "금년 중에 남북한 간 의미 있는 스포츠, 문화, 예술분야 교류와 민생차원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

하는 순수 민간교류를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약속했음.

- 이를 위해 "남북한은 민족문화 보전사업의 확대와 역사 공동연구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60여년 간 단절된 남북 간 철도운행 재개를 위한 철도 복원사업 등 이행 가능한 남북 공동 프로젝트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남북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 남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북, 러시아의 지원에 모처럼 활기(자유아시아방송, 2.26)
 -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에서 차관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식량과 원유를 공급받으면서 당국과 주민들이 모처럼 들뜬 분위기 속에서 생산 활동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다.
 - 24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금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중앙의 방침이 최근 해당 간부들에게 전달됐다"며 "방침의 의미는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원유를 이용해 경공업 원료들을 최대한 생산해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 소식통은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으나 러시아에서 지원한 많은 원유가 1월말 남포항으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중국과 연결된 송유관을 통해 라선시 '승리화학공장'으로 원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 북한은 이렇게 공급받은 원유를 가공해 섬유와 염화비닐, 합성고무와 비료원료, 도로포장용 피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지원하는 원유는 50만 톤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함.

- 이와 관련 26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올해 1월까지 kg 당 중국인민폐 11원(위안)이던 휘발유 값이 현재는 장마당에서 인민폐 5원으로 내려앉았다"며 "러시아에서 들여 온 통밀도 kg 당 인민폐 3원 20전에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 러시아의 대규모 원유지원에 힘입어 휘발유와 디젤유의 가격이 크게 내린데다 러시아에서 지원한 밀이 장마당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식량가격 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함.
- "2014년, 대북 지원 20여 년 역사상 최악의 해"(오마이뉴스, 2/27)
 - 광복 70주년과 6·15 공동 선언 15주년을 맞아 "2015 남북 관계, 돌파구를 열자"는 주제로 2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2014년은 대북 지원 20여 년 역사에서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대북 지원 단체들이 북한 내 협력 사업장을 방문하지 못한 유일한 해이며, 민간 대북 지원 규모도 5·24조치가 시행되고 남북 관계가 극도로 치달았던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토론했음.
 -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액은 118억 원이었고, 지난 2014년은 그 절반도 안 되는 54억 원인 것으로 볼 때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언이 공허해지는 대목임.
 - 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햇볕 정책도 처음에는 북한이 '거꾸로 선 흡수통일론'이라며 거부했으나 민간 교류와 대북 지원 대폭 확대를 통해 돌파하면서 신뢰를 얻어낸 것"이라며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흡수통일론이라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를 확보하려면, 5·24 조치를 해제해서 민간의 협력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하게 해 당국 간 접촉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북한동향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北인권토론회'(워싱턴, 2/17) 진행 관련 '인권문제를 정치화, 국제화하기 위해 악을 쓰고 있는 것은 인권을 무기로 하여 우리(北)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

자는데 있다'며 거듭 중단 촉구(2.25,중앙통신/케케묵은 반공화국 인권사기극)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